

자료 I

참여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 / 7대 추진과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순훈)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과 관련하여 제19회 국정과제 회의를 광양시청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번 회의는 재경부·산자부·건교부·해수부·예산처장관 등 당연직 위원,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위원과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책수석 및 비서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본 과제는 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인 국가계획으로 채택되었음.



물류로드맵 주요 내용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만 개발 (World Best Three Ports)

인천국제공항

- ▶ 인천국제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한 "다시 찾고 싶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인천공항의 2단계 확장사업을 2008년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적극 지원하고,
 - 2010년 완공 목표인 제2연륙교도 송도 신도시 개발 등을 감안하여 조기 완공을 추진키로 하였음.
 - 또한 인천공항의 주변지역을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및 국제업무지역으로 조성하여 세계적 기업의 물류거점과 비즈니스 중심화하여 신규 기·종점 항공수요를 유발하고,
 - 항공노선망 확충을 위하여 신규노선을 발굴하고 전략적·단계적인 항공자유화(open sky policy)를 추진하되 우선 한·중·일 항공자유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 ▶ 아울러 3년 이내에 싱가폴 창이공항과 네덜란드 스키플 공항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천공항의 운영을 개선키로 하고,
- 공항서비스 지표개발과 정기적인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부산항·광양항

- ▶ 한편, 부산·광양항을 혁신적인 통합물류 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요소요소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아의 관문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 2011년까지 부산신항 30선석, 광양항 33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며, 항만배후단지를 물류기업, 인근산업단지, 대학등과 연계하는 국제물류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
- 특히, 상해항 개장과 부산항의 항만시설 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05까지 부산신항 3선석을 조기 완공하고, 이에 맞추어 배후단지 2만평도 우선 완공할 계획.
- 시설에 비하여 물동량이 부족한 광양항은 항만시설 외에 항만배후물류단지 및 범광양만권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하여 광양항의 물동량을 증대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음.
- ▶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항만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 이내에 싱가폴·로텔담 수준의 항만 생산성을 확보하고, 마케팅과 경영능력이 대폭 강화된 부산항 항만운영 공사를 내년 초에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매년 「한국 최고의 컨테이너 부두」를 선정하여 항만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로 함.
- ▶ 그리고 환적화물 확대를 위하여 공동운항 참여선사를 한 뮤음으로 하여 터미널 운영사를 선정하고, 동북아 컨테이너항로 변화와 경쟁항의 환적화물 유치전략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 해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톤세제를 도입하고, 북중국·일본과의 연계수송망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국해운시장의 비관세 장벽해소와 피더선사의 전용 터미널 확보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 우리나라 국내·국제 물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7대 추진과제를 선정.

7대 추진계획

교통 시설 투자배분 조정

▲ 그 동안 도로부분에 편중된 SOC 투자를 지양하고 대량교통수단인 철도와 연안해송의 수송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 교통시설 투자배분을 대폭 조정하여 항만·철도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기로 하였음.
- 유럽의 예 : 철도투자액(1,885유로)이 도로투자액(818유로)의 2.3배

화물 운송 거부사태와 관련하여

▲ 국제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화물 자동차 운송업을 선진화하고,

- 이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개별등록제를 조기 시행하여 지입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 차원에서 다단계 주선에 대한 대책을 강구.
- 아울러 물류업체의 대형화·종합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물류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또한 영세물류업체의 신뢰성 제고, 개별차주의 화물확보 지원을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도, 화물직거래 정보화 등을 지원하고,
- 운송거부와 같은 물류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송관련 법에 「업무복귀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임.

▲ 물류거래 투명화를 위하여 신용카드결제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3자 물류기업 이용확산을 통한 거래투명화를 유도하기로 하였음.

물류 인력 양성

▲ 물류인력양성을 위하여, 부산·인천·광양 등 주요 물류도시의 대학을 물류특성화 대학으로 지정·지원하고,

- 외국 우수물류기관과 연계하여 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제물류활동을 펼칠 고급물류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할 계획임.
- 또한 항만연수원을 항만기능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여 공·항만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에 따라 필요한 기

능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기로 하였음.

국제물류관련제도 개선 및 국제물류기업 유치

▲ 국제물류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국제물류기업을 유치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을 통합·보완하고,
 - 통관절차를 물류흐름 위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며, one-stop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할 계획임.
 - 이와 같은 제도개선의 바탕 위에 2개 이상의 국제특송업체와 세계유수의 제조·물류기업의 동북아물류센타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고,
 -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지원센타」를 설치할 계획임.
- ▲** 막힘없고 서류없는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 기존 공·항만 등의 물류정보망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물류거점별·주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정보망을 통합하며, 금융·보험·해외물류망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

동북아 철도망 구축

▲으로, 향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경우에 대비하여 동북아철도망 구축사업도 동북아 국가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동북아 국가 공동으로 「동북아 철도 구축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 각국의 철도건설·운영·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 철도 협의체」를 구성한 후 동북아철도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할 계획임.
- 앞으로 동북아철도망이 구축되면 우리 경제의 배후권역이 동북아·유라시아로 확대될 것임.